

5인 이상 집합금지, 실제 인구이동·확진자 감소로 이어져

KT, 코로나 유행시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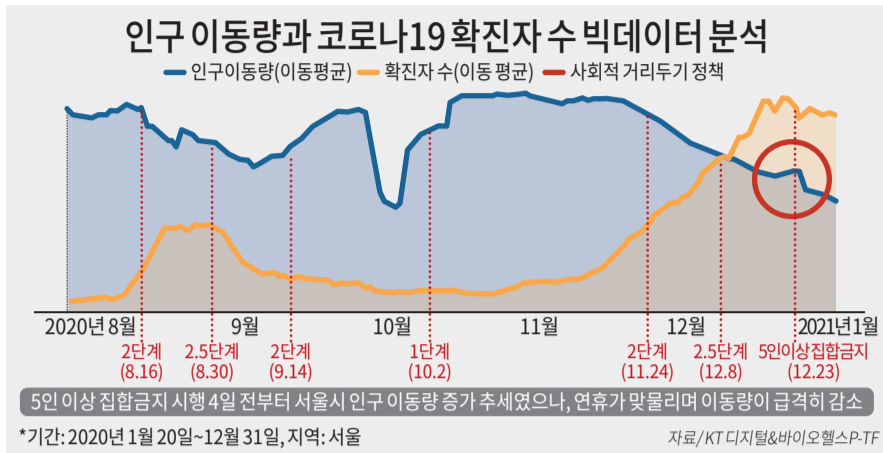
인구이동·소셜버즈, 확진자 증감비교
시민들 자발적 참여 노력 돋보여
유입인구 많을수록 확진자 비율 ↑

정부 방역정책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실시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후 실제로 인구 이동량이 크게 감소했다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 전국적 규모로 발생한 3차대 유행에서는 방역정책 강화 전에 인구 이동량이 줄어드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노력이 돋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시기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1년째를 맞아 KT 디지털&바이오헬스P-TF가 실시했다. KT 디지털&바이오헬스P-TF는 디지털 바이오헬스 신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연말에 신설된 미래가치추진실 내 사업부서다.

이번 분석은 KT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서울시 지역구별 유동인구 변동 추이, 뉴스와 SNS 등의 '소셜 버즈(buzz·특정 주제에 대한 언급)량'과 확진자 수 증감 비교로 진행됐다.

◆ '5인 이상 집합금지' 효과 있었다



KT가 분석한 유동인구 빅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에 시행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는 데 실질적 효과를 발휘했다는 결과도 도출됐다.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되기 4일 전부터 서울시 인구 이동량이 증가 추세로 전환되기 시작했으나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발효되고 성탄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이동량이 급격한 감소세로 꺾였다. 이후 확진자 수도 감소하기 시작했다.

연말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시점에 맞춰 적기에 대응해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시민들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앞서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방역 단계가 강화된 11월 24일 이전부터 이미 서울 내 이동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확진자 증가 추이를 살피면서 자발적으로 이동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 '3차 유행' 시기 코로나 피로도 늘었다
다만, 시간이 지나 코로나19 3차 유행 시기에는 시민들의 반응 속도가 줄어들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시기(2020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분석한 결과, 1, 2차 유행 때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3월 1차 유행, 8월의 2차 유행 때는 확진자 증가에 따른 이동인구의 감소가 즉각적으로 나타났지만, 3

〈서울 지역구별 확진자 비율〉

타 지역구에서 들어오는 이동인구가 많은 구	타 지역구로 나가는 이동인구가 많은 구
종로구 0.21%	강동구 0.08%
중구 0.18%	강북구 0.10%
서초구 0.15%	광진구 0.10%
마포구 0.14%	노원구 0.10%
영등포구 0.13%	구로구 0.10%

(분석기간 : 20.10.1~20.12.31) /KT

차 유행 때는 이동인구의 감소 현상이 다소 천천히 나타났다. 시민들의 반응 속도가 이전 1, 2차에 비해 더딘 셈이다.

같은 기간 트위터, 커뮤니티 등 소셜 버즈량(키워드 '코로나') 추이에서는, 1, 2차 유행보다 3차 대유행의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음에도 버즈량은 오히려 감소했다.

KT 측은 "장기간 진행된 방역 조치에 따라 시민들의 피로도가 커지고 코로나19에 대한 학습효과가 생긴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타 지역구 '유입인구' 많으면 확진자 비율도 높아

다른 지역구로부터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구는 확진자 비율(구의 거주자 수 대비 확진자 수)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구 인구의 유입이 가장 많은 중구와 종로구는 확진자비율이 각각 0.18%, 0.21%를 기록했다. 다만 강서구, 중랑구는 유입인구 비율은 낮았음에도 지역에서 발생한 집단감염(강서구 11월 26일 댄스학원, 12월 12일 종교시설, 중랑구 12월 말 종교시설)으로 인해 확진자 비율이 높았다.

3차 유행 때의 확진자 증가와 인구 이동량을 자세히 살펴보면,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후에도 확진자가 늘어난 자치구는 그렇지 않은 구에 비해 유입인구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KT 미래가치추진실장 김형욱 부사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피로와 불만, 그리고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KT는 국민의 안전과 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빅데이터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 디지털&바이오헬스P-TF는 KT의 핵심 역량인 AI와 빅데이터 등 ICT 역량을 활용해 헬스 데이터 기반 디지털 바이오헬스 플랫폼 사업 등 업계의 디지털전환(DX)을 주도할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줄어드는 현금거래... 5만원권 수명 1년 늘어

한은 2020년 은행권 유통수명 추정 2019년비 3~12개월 유통수명 증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비대면 거래가 많아지면서 은행권의 수명이 길어졌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은행권 유통수명 추정 결과'에 따르면 권종별 유통수명은 천원권 60개월, 5천원권 60개월, 만원권 130개월, 5만원권 174개월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유통수명이란 제조 은행권(신권)이 한은 창구에서 발행된 후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워 정도로 손상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말한다.

저액권의 경우 주로 물품 및 서비스 구입, 거스름돈 등의 용도로 빈번하게 사용됨에 따라 고액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19~20년 권종별 유통수명 추정 비교〉

구분	2019년 (A)	2020년 (B)	증감 (B-A)
천원권	53	60	7
오천원권	49	60	11
만원권	127	130	3
오만원권	162	174	12

/한국은행

로 유통수명이 짧았다.

이번 추정결과를 2019년 결과와 비교하면 은행권 수명이 3~12개월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비현금 지급수단의 사용이 늘었고,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거래와 안전자산적 비축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은행권의 유통수명을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최저액면 및 중간액면은 길고, 최고액면은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각국의 유통수명 추정방식이 다른만큼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최저액면 및 중간액면 유통수명은 우수한 품질과 올바른 화폐사용행태 등으로 주요국에 비해 긴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최고액면인 5만원권의 유통수명은 주요국 중 영국, 호주, 미국, 스위스에 이어 다섯 번째로 긴 수준이다. 우리나라 5만원권의 경우 가치저장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는 주요국의 최고액면과 달리 상거래와 경조금, 용돈 등 개인간 거래에서 널리 사용됨에 따라 이들 주요국 최고액면에 비해 유통수명이 다소 짧았다. /안상미 기자 smahn1@

정부, 보상 소급적용 소극적 "법률마련 수개월"

▶▶ 1년 '생존 vs 방역...'서 계속

'소급적용'이란 법 통과 이후의 손실에 대한 보상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지난해부터 소상공인들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특별법 대표 발의자 중 한명인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2019년 국세청의 업종별 소득신고 데이터와 한국 신용데이터의 일반·중점관리시설 전국 16만 여 곳의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비율 데이터를 분석해 손실금액을 산출한 결과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은 최소 32조원(피해금액의 70% 보상시)에서 최대 41조원(90% 보상시)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면서 이동주 의원은 "집합금지(제한)명령에 대한 보상은 국가 재정이 부담하되 영업제한 외 사업자(2020년 신규 개업 및 폐업자 포함),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대해선 국가재정 외에도 사회현대기금을 조성해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소급적용'에 대해서 정부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 국민 의힘 최승재 의원이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적용 없다'는 (기존)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한 질문에 대해 "손실보상은 필요하다"면서도 "그 근거는 헌법 23조 3항인데 손실보상도 법률로 해야 하며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모범도 있지만 시행령까지 해야 법률이 된다. 하지만 이 과정까지 거치면 수 개월이 걸리는데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그때까지 기다렸다 소급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지난해 입은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못하겠다는게 정부의 입장인 셈이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의원은 이날 왼쪽 가슴엔 국회의원 배지를, 오른쪽엔 연합회 배지를 각각 달고 대정부질의를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같은 날 오전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피해 업종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영업손실 보상안 소급 적용 ▲매출 손실액 기준으로 손실 보상 ▲세제감면·무이자대출·강도 높은 임대료 지원책 마련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 등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5대 요구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특히 일부 참석 소상공인들은 삭발을 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비슷한 시간, 권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취임 첫 행보로 소상공인 창업 지원 시설인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를 방문해 버팀목 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전날 저녁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안을 재가받은 권 장관은 취임식도 미룬 채 첫 날부터 소상공인 현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권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재난지원금 같은 게 시간이 지나서 보면 손실보상의 의미가 있다"면서 "(지금)손실보상이었냐 아니었냐를 따지고 있을 만큼 한가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지난해 식중독 발생, 역대최저 178건

코로나 여파 위생·안전관리 강화

지난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생과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식중독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식중독 발생건수는 178건, 인구 100만명당 53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2년 이래 가장 적은 환자수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5년 평균 식중독 발생과

비교하여 볼 때 발생건수는 52%, 환자수는 40% 수준에 그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민들이 손씻기 등 위생에 대한 높아진데다, 학교 출석일수가 줄어들면서 학교 학교 집단급식소에서의 식중독 발생건수, 환자수가 급감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음식점 식중독 발생건수는 103건으로 시설 중 가장 많았으나, 지난 5년 평균 210건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환자수도 1870명에서 827

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지난해 학교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건수는 16건으로 지난 5년 평균 34건보다 감소했고, 환자수도 2304명에서 448명으로 대폭 줄었다.

학교외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건수는 33건, 환자수는 1086명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식중독 발생이 줄어들어 전체 환자수 기준 40%로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급식인원이 감소한 학교와 달리 기업체, 병원 등 집단급식소는 이용자 변화가 없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